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11
----------	------

발의연월일 : 2025. 4. 17.

발 의 자 : 신성범 · 김도읍 · 김선교
김승수 · 김예지 · 김종양
김태호 · 민홍철 · 박대출
박덕흠 · 박정하 · 서일준
서천호 · 이성권 · 이양수
이종욱 · 장동혁 · 주호영
차규근 · 천하람 · 최보운
최수진 · 최형두 · 한정애
의원(24인)

제안이유

6·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 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켰는바, 이를 각각 거창사건, 산청 · 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등”이라 함)이라 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창사건등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

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생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창사

전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관련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대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7. 관련자 추모사업 또는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 5인 이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관련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보상금등의 신청접수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이익 처우 금지) 관련자 및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의 손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 ①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2.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이를 입은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의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탁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위원회는 해당 시·군 등에 보상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피해신고 신고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실무위원회에 보상

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제1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正本(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관련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4. 관련자가 거창사건등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다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추모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및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

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